

'이재명 민생현안 1호' 안양 연현마을에 시민공원 조성

공공주택 건설 계획 바뀌 4만여㎡ 규모 시민공원으로 GB훼손지 복구...인근 시군 부지 활용한 전국 첫 사례

'이재명 민생현안 1호'인 안양 연현마을, 공공개발사업 예정부지에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공원'이 들어선다.

11만7000여㎡ 부지에 1187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던 처음 계획 대신 4만여㎡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계획대로 친환경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안양시민들은 쾌적한 도시숲을 즐길 수 있게 되며, 경기도는 700억원의 방음벽 설치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도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양 연현마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 등으로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7월 취임 이후 처음 방문한 민생 현장이자 공공개발을 제안했던 민선 7기 '민생현안 1호'로 알려진 곳이다.

도는 당초 이곳에 1187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인 입지 여건으로 인해 개발 사업 추진 시 방음벽 설치 등에 700억원이 추가 소요되면서 큰 난관에 부딪혔다.

도는 이에 안양시민들의 쾌적한 여가 활용을 주안점에 두고 공공주택 건설 대신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데 따른 예산 절감은 '땀'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에 인근 시·군 부지를 활용하는 '전국 최초' 사례다.

'직접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정부 정책도 충실하게 이행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경우, 사업구역 전체 훼손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부지를 시군 관할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확보해 녹지 복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 복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시행자들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관행처럼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안양시 인근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물량을 활용, 시민공원 조성

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향후 행정 절차로 올해 안양 연현마을의 아스콘공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복구 진행 대상으로 확정하고, 2021년 내로 보상 및 착공을 마무리한 뒤 2023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남

뉴스

남·북가좌2동 지나는 마을버스 '서대문15번' 19일 신설

서울 서대문구는 19일 오전 6시 '서대문15번' 신설 마을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서대문구에 새 마을버스 노선이 생기는 것은 1994년 '서대문04번' 마을버스 개통 이후 26년 만이다.

구는 2018년 실시한 마을버스 수요조사에서 남가좌2동과 북가좌2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부터 노선 신설을 본격 추진했다.

실제 이 지역은 주민들이 지하철이나 간선도로까지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20분 이상 우회하거나 1.5Km를 걸어야 하는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이었다.

구는 주민 등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서대문구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사위원회 심의, 서울시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했다.

새 노선은 증산역(증산2교) 정류소를 기점으로, 명지대후문 정류소를 종점으로 해 북가좌사거리, 북가좌노인복지센터, 명지전문대, 북가좌두산위브아파트, 북가좌4

거리 등을 지난다.

왕복 4km 운행구간에 총 정류소는 24개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0~12분의 배차 간격으로 하루 90여 회 운행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은 물론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환승하려는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정식 운행에 앞서 이달 17~18일 이들 구간은 시범행사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신설하는 데에는 주민 간 이해

관계가 엇갈려 시행까지 난관이 많지만, 이번 서대문구 사례의 경우에는 노선 인근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구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합리적인 신설 노선과 정류소의 위치, 노선 인근 주차구획 재정비 안 등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특히 구청장과 주민들과 차량에 함께 탑승해 사전 모의 주행을 실시하고 도로 여건과 정류장 간격, 소음 영향, 원활한 교행여부 등을 체크하는 등 현장 중심 행정을 적극 실천했다.



"중국인 유학생이 온다"

충북 지자체·대학 비상...대책반 가동

중국인 유학생의 대거 입국을 앞두고 충북 지자체와 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반을 가동한다.

충북에서는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의심환자의 자가격리·능동감시도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 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대학 개강을 앞두고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은 도내 1500~16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학마다 중국인 유학생 입국 일정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매일 변동사항이 발생해 정확한 숫자는 가늠하기 어렵다.

충북도는 상황관리반을 구성하고 중국인 유학생 입국일정 등 현황을 대학과 공유하고 있다.

대학이나 유학생을 직접 관리할 권한은 없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 등에 전달하고 대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다.

각 시·군에서도 대학별 지원반을 구성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

청주시와 충주·제천시, 영동·괴산·음성군은 17일~18일에도 중국인 유학생 입국 대응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한국교원대,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한국교통대, 세명대, 유원대, 중원대, 극동대, 충청대, 우석대 등 12개 대학은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모두 교내 기숙사에 수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 전원 수용'이라는 조유의 상황에 대비할 메뉴얼도 없을뿐더러, 일부는 시설 방역 등 예산 문제가 걱정되고 있다.

또 중국인 유학생 입국이 일시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산

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기숙사 수용·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숙사 수용 방침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유학생을 강제로 격리할 방법이 없는 것도 고민이다.

충북 지자체와 대학은 이런 어려움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기숙사 격리 표준 매뉴얼 마련, 방역예산 등 예비비 지급을 요청했다.

교육부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행히 교육부가 중국인 유학생 관리방안을 마련했지만 보다 세밀한 격리·방역 매뉴얼 등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전날까지 213명이 자는 전날 기준 자가격리 1명, 능동감시 3명 등 모두 4명이 남아 있다.

추가로 의심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충북은 19일자로 모든 의심환자가 관리대상에서 해제된다.

이들 외에 지자체가 자체 파악한 중국 입국자 13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증상 발현 유무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전날까지 213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발열과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주로 나타낸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중국·홍콩·필리핀·프랑스에서 1775명이 사망했고 세계 각국에서 7만1288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철도, 민간기업과 스마트기술 철도안전 접목 방안 모색

오늘 스마트 철도 안전관리 컨퍼런스

한국철도가 18일 오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리는 스마트 철도 안전관리 컨퍼런스에서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철도안전에 접목한 사례를 공유하고 기술교류를 논의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도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철도를 비롯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사물인터넷협회가 공동 주관하

는 이번 행사에는 철도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철도 공공기관과 ICT분야 민간기업의 교류를 통해 철도 안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과 아이디어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철도는 차량, 시설, 전기 등 분야에서 스마트 철도 관리기술 활용 방안을 발표한

다.

차량 유지보수에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나 드론을 이용한 위험요소 점검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작업자 안전을 높인 사례와 선로 및 전차선 자동 점검장비 도입 등을 소개한다.

또한 선로 결함 검측차량 국산화, 원격감시체계 확대구축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철도시설 유지보수센터 구축 등 스마트 SOC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폭설은 처음이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을 한옥 지붕위로 새하얀 눈이 내리고 있다. 하얗게 내리는 눈발로 안개가 낀 듯 흐릿하게 보인다.

"지구환경 살려요" 강원 15개 초·중고 생태학교 운영

올해 강원도 내 15개 초·중학교에서 생태환경교육(Eco-Belt)을 위한 생태학교가 운영된다.

강원도교육청(민병희 교육감)은 강원생태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체험활동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태환경교육은 학교, 환경단체,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유기적 연결망으로 학생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알리고 싶

는 방향을 교육하기 위해 구축했다.

강원 생태학교는 △DMZ 생태학교 △에코스쿨 모델학교 △전통문화 생태학교 등으로 운영된다.

대구시·관광업계, 공격적 마케팅 추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관광·항공업계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포스트(Post) 코로나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경북 관광의 해'인 올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내외 관광객 1000만명을 목표로 세웠으나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지역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이 50~80% 감소했다.

특히 중국인·아웃바운드 여행 상품은 100% 취소돼 관광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성은 이코리야스테이션 대표는 "상품 개발, 홍보, 해외 관광객 유치까지 몇개월이 소요된다. 대구시가 지금부터 온라인을 통한 유치 마케팅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만 행복드림투어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업계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업계가 자구책을 세워야겠지만 대구시도 캠페인을 벌이고 업계와 통합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